

미래세대 도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만든다

중기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발표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전면 시행
국경·공간 초월한 실증환경 구축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등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2027년까지 전국에 10곳을 만든다.

올해 2~3곳을 시범 조성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일부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에 대해 모든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해 혁신을 전폭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해외 실증거점 조성을 통한 충분한 실증 지원,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인증·허가 등 원스톱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서 (왼쪽부터)정문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한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먼저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할 수 있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을 허용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외국에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기관인 유엘(UL) 솔루션과 협력해 전반적인 첨단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유전자치료제 등의 첨단바이오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업무협약(MOU)에 이어 올해 안에 일본의 ‘쇼난 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또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

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해 성능과 안정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 신산업 보험요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혁신 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해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기술개발) 등 표준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 가속화를 위해 민관 협업과 자금, 공공조달, 인력 등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반려동물 사료 싸게 팔면 공급 안 해”

공정위,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
독점 수입 권한으로 불공정행위 행사

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 독점 수입 업체가 동물병원 등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제품 판매가격을 강제하다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표’를 제공해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영국 사료 회사인 테크라가 생산하는 처방식 사료에 대한 국내 독점 수입 판매사로, 동물병원은

이 회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의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리퓨어헬스케어는 2022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86개社 선정

중기부·소진공 지원… 경쟁률 3.3 대 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8일 중기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동사업에는 총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협동조합은 업력, 규모, 매출, 고용 기준에 따라 ‘초기·성장·도약’의 3단계 구분하며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

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 비율은 공동장비의 경우 30%, 그 외 공동사업은 20%다.

먼저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뽑혔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옷칠공업), 느티나무협동조합(사진·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안전보건공, 조선업 外人 산재예방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맞손
실효성 있는 교육 실행 방안 마련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서울 랜드마크 타워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과 실효성 있는 교육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공단은 협약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조선업 신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은 2021년부터 증가하고 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로 구인난이 심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약 2배인 5000여명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숙련기술인력(E-7)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환경변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최성원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왼쪽)와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이 지난 4일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부터 구축한 협력 범위를 기존 ‘콘텐츠 공동개발’에서 ‘통역강사 양성’ 및 ‘체협교육’으로 확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희망포럼’ 참가자 모집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6월22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2023년 기업승계 희망포럼’ 참가자를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 시작한 기업승계 희망포럼은 경제·산업 환경 변화와 1·2세대 중소기업인 간 소통에 대한 명사 강연 등으로 꾸러져 참가자의 95% 이상이 만족하는 명품포럼

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 올해 포럼에선 최근 이슈인 ChatGPT를 비롯해 세대 간 소통과 리더십에 대한 명사들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포럼은 1·2세대 중소기업인 동반으로 참가해야하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